

단체장 건의→ 정부 후보지 공모→ 주민투표 선정

■광주 군 비행장 이전 어떻게 되나

후보자 선정과정서 주민 반발 예상

개발 이익금은 이전할 지역에 지원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여야 의원 공동발의로 추진돼 8년여 동안 지지부진했던 광주 군 공항 이전이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특히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특별법에는 군 공항 이전 사업 방식 및 지원, 이전 부지 등 주민투표로 선정하는 방안 등이 담겨있어 군 공항 이전문제가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특별법이 내년 2월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군 공항 이전에 대한 절차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군 공항 이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이전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 반발도 예상된다.

◇우여곡절 끝 법안 발의=도심지 군 공항 이전 문제는 그동안 ‘법안 비용 추계서’ 기준 소요비용이 7조원에 달하는 예산문제 등으로 정부 부처간 이견과 국회 국방위원회의 비협조로 해결전망이 불투명했었다.

군 비행장 이전문제는 지난 2004년 민주당 김동철 의원이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이후 관련 법안만 11개가 제출될 만큼 피해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지난 2월에는 국회 내에 ‘군 공항 주변대책특위’까지 구성됐다.

하지만, 한나라당 소속 국방위원들의 반대로 공전을 거듭, 이번 18대 국회에서도 사실상 무산될 것이라는 우려마저 제기돼 왔었다.

이에 광주와 수원, 대구 등 공항을 하고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국방부장관을 설득했고, 결국 국방부가 준비했던 법안을 토대로 새롭게 수정한 특별법안을 의원 입법 형식으로 제정키로 하고, 이를 여야가 공동으로 제출하게 됐다.

◇이전 부지 선정 어떻게=기존 군 공항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장이 군 공항 이전을 국방부장관에게 건의하면, 장관은 군사작전 및 군 공항 입지의 적합성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이전 후보지로 선정할 수 있다. 광주 군 공항 이전 후보지의 경우 광주·전남지역이 군사작전 지역인 만큼 전남지역 내로 제한될 전망이다.

앞서 국방부장관은 후보지 선정을 위한 자문을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후보지 최종 선정은 국방부장관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해 주민투표를 거쳐 선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는 군 항공기의 자유로운 기동 여부와 훈련 공역 등의 전술 문제와 소음 피해를 감안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조건 등을



‘군용 비행장 문제해결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소속 광주지역 김동철·이용섭·조영택·김영진 의원과 군용 비행장 소음 피해지역인 광주지역 시·구의회 의원들이 25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 공항 이전 및 지원 특별법’ 발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충족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전남지역 내에 광주 군 공항 이전 대상 후보지는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민 반발, 이전 순탄치 않을 듯=또한, 이전 후보지 최종 선정과정에서 주민투표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질 경우 광주 군 공항 이전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지난 2009년 광주 군 공항 이전 최적으로 무안국제공항이 공식 거론됐다가 무안군과 주민들의 강력 반발이 이어졌다. 당시 국방부가 의뢰한 ‘광주 군사공항 이전 타당성 용역’ 결과 무안국제공항이 최적으로 거론됐었기 때문이다.

용역결과 광주 군 비행장 이전시 대체지역으로는 인근 서해안 지역이 바람직하며, 실제 이전이 구체화될 경우 무안국제공항이 최적지 가운데

한 곳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는 따로 군용 비행장을 건설하는 것보다 기존 공항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무안군과 주민들은 군 공항이 무안으로 이전해 올 경우 무안국제공항의 확장 및 활성화 등에 걸림돌이 되고, 무안기업도시 건설에 차질이 빚을 것이라는 점을 내세워 반대성명을 발표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이 때문에 국방부는 “광주와 전남, 무안군 등의 지자체가 합의해 이전을 요구하면 검토한다는 방침”이라고 한발 물러서면서 논란은 일단락됐다.

◇이전 사업 방식 및 지원은=군 공항 이전 사업방식은 일정한 자원을 갖춘 사업 시행자가 군 공항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국방부는 용도 폐지(기존 군 공항) 한 재산을 양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또한, 국가와 지

방자치단체는 이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전 사업 시행자에 대한 각종 부담금을 면제해주도록 했다.

아울러 ‘군 공항 이전 및 지원 특별법’에는 군 공항 이전 대상지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특례가 포함돼 있다.

특례에는 군 공항 이전 주변 지역의 개발을 위한 사업에 대해 국고 보조금 인상 지원과 지역주민의 우선 고용 및 참여를 명시했다.

김동철 의원은 “현재 광주공항 땅값을 평당 200만원으로 감안할 경우 180만평 규모의 군 공항을 개발할 경우 이에 따른 개발 이익은 2조 원 가까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 중 일부는 군 공항 이전 사업에 사용하고 일부는 이전 주변 지역 지원사업에 사용하면 충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최현일기자 cki@kwangju.co.kr

이희호·현정은 조문단 오늘 방북

김정은 메시지 나올까 남북관계 개선 관심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조문을 위해 26일 방북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국가장례위원장을 맡은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타고 평양으로 들어가는 조문단은 김 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기념공전을 찾아 조문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상주인 김정은과 접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특히, 민간 차원의 조문단이라는 하지만 남측 인사들과 처음 대면하는 김정은이 어떠한 메시지를 제시할 것인지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조문 정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김 위원장이 세부적인 대남 메시지를 밝힐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하지만 김정은 부위원장이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토대로 남북 관계 발전을 바란다는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09년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당시 남측을 방문한 북측 고위급 조문단은 빈소에 조문하고 나서 이 여사와 별도로 면담한 적이 있다.

이와 관련, 최경환 김대중평화센터 비서관은 25일 “이 여사가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 등으로부터 방북과 관련한 조언을 들었다”며 “특히, 이 여사가 이번 조문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되기를 원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북측에서 이에 상응하는 입장을 보일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정은 부위원장이 3년 넘게 중단된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활성화 등 남북 교류 협력 사업에 대해 언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에 현대아산 장영직 대표를 비롯해 김영현 관광경협본부장(상무)과 부장, 사원 등 임직원 4명이 현 회장과 동행하는 것도 이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전남 예산 증액 막판 총력

국회 예결위 오늘부터 국비 예산 심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감액심사가 감액규모를 둘러싼 여야의 견해차로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26일부터 증액심사에 착수하면서 광주·전남지역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예결소위 의원들의 활동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예결위에 따르면 지난 20일부

터 계수조정소위 감액심사가 본격적으로 재개된 이후 나흘간 여야 합의로 감액한 예산은 전체 세출예산 326조1000억원 중 800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소관 상임위원회의 감액의견에 따라 의결한 것을 제외하면 감액예산이 1000억원대에 그쳤다.

이는 민주당이 ▲4대강 후속사업 ▲국방예산 ▲해외자원개발사

업 ▲특혜성 지역사업 등을 중심으로 9조원 규모의 감액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3조~4조원 이상의 감액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는 여야 간 의견차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이 ▲4대강 후속사업’으로 규정된 저수지독논이기사업(1조1560억원)과 지방하천사업(7600억원) 등과 ‘형님예산’으로 지목한 포항-삼척철도건설(1100억원)

과 울산~포항복선전철(2200억원) 등은 보류 결정이 났다.

이와 관련, 예결위 민주당합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5조3500억원 규모의 보류 삭감사업과 삭감액수가 특정되지 않은 사업 등을 고려할 때 삭감 가능규모는 총 7조6000억원에 달한다”며 “내일부터는 계수조정소위에서 증액사업과 감액사업을 동시에 협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광주·전남지역의 관심은 주요 현안사업 국비 예산 확보에 쏠리고 있다.

각 상임위에서 증액해 예결위로 올라온 예산들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면서 많은 예산들이 사라지거나 대폭 삭감될 수 있기 때문에 예결위 소속 의원들은 물론 모든 지역 국회의원들이 전락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결소위 소속의 민주당합당 주승용 의원은 “26일부터 증액예산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있을텐데 감액예산 삭감규모가 너무 작아 지역예산 지키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며 “하지만 강기정 의원 등과 잘 속의하고 대응해서 지역예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빛의만평

- 김중두



산타도 못해먹겠다



함께 가는 따뜻한 사회 공생발전으로 실천하겠습니다

1만 석 이상의 재산은 모으지 않으며, 찾아오는 손님은 후하게 대접하고, 흥년에는 다른 사람의 노닐을 사들이지 않는다.

우리 역사에서 가장 오랫동안 부(富)를 이어온 '경주 최 부자집'의 전통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전통에 기반해 국가와 기업, 개인이 모두 함께 발전하는 아름다운 동행, 바로 '공생발전'입니다.

빈부차를 없애고 경제발전의 혜택이 전 국민에게 돌아가며, 더불어 고용도 증가하는 '다 함께 잘사는 더 큰 대한민국' 서로가 서로를 보살피는 따뜻한 마음이 모두가 행복해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듭니다.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